

데스크 시국



김미은
문화부장 겸 부국장

“아, 이 공연을 광주시장이 관람했으면 좋았을 텐데.” 며칠 전 광주시청 공연을 보고 나오면서 조금 ‘엇똥’ 생각을 했다. 이날 연주에서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스티븐 허프가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황제’를 협연했다. 광주에서는 해외 클래식 아티스트의 공연을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이 전무한 상황에서 열린 연주회여서 애호가들의 관심이 높았고 표도 일찌감치 매진됐다.

이날 공연은 시장의 주 무대인 광주문화예술회관 리모텔링에 들어감에 따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렸다. 하지만 이곳은 규모나 음향시설이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함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여서 연주 내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모처럼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공연을 접한 관객들도 마찬가지였다. 광주시장이 관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그래서였다. 시장이 공연 후 아쉬움을 토로하는 관람객들의 의견을 들어 ‘클래식 전용홀’ 건립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하는 ‘엇똥한 상상’을 해 본 것이다.

이용섭 시장은 국악 장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문화계에 잘 알려져 있다. 공약이기도 한 광주전통생활음악당은 400억 원 규모로 지어지는데 현재 확보된 2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70억의 광주마루에서 열리고 있는 국악 상설 공연은 이 시장의 대표적인 ‘관심 사항’이

시장님의 ‘관심 사항’

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운영하는 상설 공연은 2019년 주 1회로 진행되다 시장의 ‘확대’ 지시로 현재는 주 5일씩 열리고 있다.

하지만 빛고을국악전수관, 전통문화관에서 이미 매주 세 차례 국악 무대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비슷비슷한 공연이 특정 장소에서 주 5일씩이나 진행되는 건 예산 낭비에 경쟁력도 없다. 올해 예산은 무려 22억 7000만 원. 지난해에는 24억 5000만 원을 썼다. 시장이 주도적으로 추켜든 사업이 아니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고향악단·발레단 등 광주문예회관 소속 8개 예술단체가 1년 동안 사용하는 공연 예산은 35억 9000만 원이다. 회관의 기획 공연 예산은 6억 원에 불과하다.

시의 문화 관련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르의 ‘쏠림’ 현상은 문제가 있다. 타 장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건 당연하다. 만약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자치단체장 말 한마디가 좌지우지

개관 5년여 만에 폐관하겠다고 시가 발표했던 광주시립 사진전시관은 존치 쪽으로 다시 가닥이 잡혔다. 시립예술단체의 연습실 부족 문제, 타 미술 장르와의 경쟁성 문제, 전시장으로 적합하지 못한 공간 등 시가 폐관 이유로 들었던 이유는 몇 달 사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기존에 있던 공간이 갑자기 문을 닫는다고 할 때, 관련 당사자들이 반발할 거라는 건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시는 관련 조례조차 제대로 살피지 않은 데다, 사전검사와 일정 소통도 없이 일을 밀어붙였고, 결국 ‘원정’으로 돌아갔다.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원인 중 하나로, 사진전시관

이 ‘전 시장의 관심 사항’이었다는 데 있지 않을까 추측하는 이들이 많다. 현 시장이 추진한 사업이었다면 누구도 ‘대안 없는 폐관’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식의 행정이라면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

문화계 ‘장르 쏠림’ 현상 경계해야

자치단체장의 ‘관심 사항’은 오래 묵은 숙제를 신속히 해결해 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합리적인 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부작용을 낳는다. 따라서 그 방어막이 사라졌을 때도 자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모든 사업은 타당한 이유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어떤 때는 소외되고, 어떤 때는 대우받는 일이 반복되는 한 문화 발전은 없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대선도 코앞이다.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은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직이든 아니든 출마 예정자 모두 다양한 문화계 인사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중 일부가 광주 문화계에 대한 진정한 고민 대신 자신의 ‘자리’ 확보를 위한 ‘잣대’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아찔해진다.

이 글을 쓰면서 광주시가 ‘여수 밤바다’ 같은 노래를 만들겠다고 추진했던 ‘광주의 노래’ 사업이 떠올랐다. 생뚱맞은 이 사업 역시 ‘기존 ‘광주시민의 노래’가 30년이 되었는 데도 시민들이 전혀 모르는 등 대중성이 없고 구시대적이다’라는 시장의 한마디에서 시작했다. 기사를 찾아보니 지난해 1월 2000만 원을 들여 조영수 작곡가가 ‘아름다운 광주에서’를 만들었는데, 이후 이 노래가 어디선가 ‘불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는 것 같다. 누구도 이 노래 들으신 분 있으신지?

은펜칼럼



심명섭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광산구 순회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 앞으로도 그 변화 속도는 더욱 더 가속화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생존을 위협하기도 한다. 변화의 원인은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것도 있지만 전혀 의도하지 않은 외부 요인에 의한 것도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인 감염병은 기원전의 천연두, 14세기의 흑사병, 19세기의 독감,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을 들 수 있다.

1년 반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평범했던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모임과 만남을 필요로 하는 주요한 집단인 기관, 단체, 학교, 회사 등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고, 음식점·카페·북지관·도서관 등의 모임 장소는 이제 더 이상 만남과 휴식, 배움, 교제의 장소가 아닌 위험과 불안의 장소가 되어 버렸다. 코로나19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이렇게 변화시켰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팬데믹으로 인해 도서관이 집단 감염의

포스트 코로나, 길을 찾고 대안을 마련하자

매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전면적으로 휴·폐관이 반복되면서 최소한의 자료 대출 서비스를 제외한 기존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원활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반면에 ‘집콕’ 생활이 늘면서 독서 관련 온라인 플랫폼들이 더 다양해지고 구입도 증가했으니 오히려 독서 문화의 보급은 크게 확대되었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여기에서 코로나 시대에 도서관이 추진해야 할 6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비대면 도서관 이용 환경 조성, 온라인·비대면 콘텐츠 다양화, 집에서 이용하는 도서관 서비스 강화, 디지털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온라인·비대면 기술 인프라 강화, 도서관 안전망 구축 매뉴얼 마련 등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확보는 물론 비상 상황시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 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관련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이용자를 위한 인적 자료의 재구성성과 서비스 혁신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대인들은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컴퓨터, 휴대폰 등 인터넷과 함께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전자책, 오디오북, 팟캐스트, 유튜브 등 무수히 많은 공간이 디지털상에 존재한다. 과거에는 지식 문화의 보고가 단지 종이책이었지만 지금은 지식을 알려주는 매체가 이처럼 다양해졌다. 따라서 이제까지 책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

또는 가치와는 별개로 지식을 전달하고 문화의 흐름을 전달하는 책의 주요 기능을 이미 다른 콘텐츠들이 더 쉽고 확산성 높은 방식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종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구조의 변동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서관 또한 이러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이용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자료 등 독서 환경의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할 사회구조 변동의 문제는 코로나19 이전의 사고방식과 수준으로는 결코 해결될 사안 아니다. 또한 이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될 일도 아니다. 우리 모두의 중지를 모아 코로나19 이후의 길을 찾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달 들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됐다.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완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공포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물리적 방역뿐 아니라 심리적 방역도 강화해야 한다.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는 감염병에 걸리지 않는 것, 걸리더라도 남에게 옮기지 않는 것, 치유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대처해야 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작금의 상황에서 이 책을 읽고 공감함으로써 따뜻한 위로와 힐링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

기고

국민이 깨어야 나라가 산다

사람도 아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발전, 계층 간 갈등 해소, 사분오열된 국민을 통합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치러진다. 대외적으로는 미·중의 대립 속에서 북한과의 경직된 상황 등으로 우리의 외교적 역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처럼 국가의 명운이 달린 엄중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하고, 공정한 선거로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요사이 여야의 후보로 나선 분들의 언행을 보면 사분오열된 이 나라를 화해와 통합으로 이끌면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국민민안과 복지 증진의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 특히 건전한 정책적 대결보다는 진영 논리에 빠져 확인되지 않은 각종 흑색선전이나 모함과 사적인 감정·증거가 섞인 죽기 살기식의 날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상당수 국민이 건전한 소통이나 합리적인 주장보다는 일부 특정 후보나 진영에 맹목적인 자세로 임하거나, 다른 후보나 정당에는 저질스러운 언어를 동원하여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이전투구의 현상을 자주 보게 된다. ‘까미귀 싸우는 골에 백묘야 가지 말라’는 옛말과 같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하는 정치 혐오증까지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는 나와 다름을 인정하여, 다른 의견과 주장을 경청하고 토론하면서, 언제든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수정하고 따를 수 있는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한다. 한때 작금의 정치 판도는 독선이나 편향된 흑백 논리의 정치 환경으로 고착되어 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정치에 민감하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 상황에 따라 모든 사고와 행동이 종속되고, 이념과 지역에 따라 확연히 구획되어 갈수록 폐쇄적이고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제는 보편화된 상식과 열린 사고에 의한 배려와 소통이 절실해지고 있다. 누구도 이 사회를 특정 이념이나 정치 사상, 독선적 편견으로 이끌어 갈 수 없음을 자각하고 지나친 편 가르기나 이념적 갈등, 상호 비방을 종식시켜 민주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행복한 사회로 나가게 해야 한다.

이제 공은 국민에게 넘어왔다. 각 정당에서 추천한 인물들과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들 중에서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심 없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선거 때마다 지역적 당파와 지역, 학연 등에 얽매이고 확인되지 않는 선전선동에 속아 인물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거나, 추종자들의 온갖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치 혐오증으로 무관심하거나 선입견적 편향성을 버리고, 냉철한 합리적 사고와 주체성의 바탕 위에서 제대로 인물을 검증하여, 지도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존망 발부유책’(國家存亡 匹夫有責)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이 깨어야 나라가 산다.

社說

문 닫은 ‘망끝 호텔’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해남망끝호텔과 한옥호텔인 여수 오동재 및 영암 영산재 등 전남개발공사가 보유한 관광호텔들이 적자가 누적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급기야 행정안전부의 경영 개선 명령에 따라 수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이마져 6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전남도는 여수세계박람회와 F1대회 등 국제대회를 앞두고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이들 세 개 호텔을 전남개발공사를 통해 매입하거나 새로 조성했지만 매년 적자에 허덕여 왔다.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5년 6월 호텔 운영이 민간사업과 중복된다며 민간에 이양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호텔 업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이 막힌 데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매수 세 체제가 없는 실정이다. 망끝호텔의 경우 지난 2009년 법원 경매로 35억 원에 낙찰받아 리모델링에 50억 원을 투입했지만 적자를 면치 못했

다. 2015년 매각 추진 이후 열두 차례나 유찰되고 두 차례는 매매계약까지 체결됐으나 끝내 파기됐다. 2017년부터는 문을 닫았지만 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 현재가 계속 투입되고 있다. 오동재와 영산재는 현재 위탁 운영 중인데, 영산재는 감정가가 116억 원에서 96억 원으로 떨어졌음에도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호텔을 헐값에 매각하기보다는 공적 활용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이들 호텔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거처야겠지만 공공기관 연수시설이나 청소년·농어민 대상 수련회·워크숍, 소규모 전시컨벤션 등으로 용도를 넓혀 도민과 관광객이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겠다.

전남 ‘공직자 부동산 투기’ 철저히 수사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최근 밝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조직적 투기 정황은 충격적이다. LH 직원들과 그 친척·지인 등 수십 명이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지난달 말 임명된 지 3개월 월 만에 물러나야 했다. 김 비서관은 53억여 원의 은행에서 빌려 서울 마곡동에 65억 원대 상가 두 곳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나라 전체가 부동산 투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전국에서 선출직·임명직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전남에서도 부동산 투기 의심 유형이 적발됐다. 전남도는 최근 도와 시군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벌인 토지 투

기 조사 결과 3건의 투기 의심 유형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인 수사를 의뢰한 대상은 순천 왕지2지구 도시개발 관련 순천시 공무원 1명,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 관련 광양시 공무원 3명, 여수 경도 관광단지 개발 관련 전남개발공사 임직원 1명 등이다. 전남도는 또 공직자 투기 조사와 별도로 토지 자본 쪼개기 투기가 의심된 3건에 대해서도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 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우리는 그동안 LH에서 비롯된 사태가 고위공직자 전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일소의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하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의뢰받은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례를 낱알이 밝혀내야 한다. 전남도 역시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촘촘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대선의 시간이 도래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출사표가 이어지면서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의 출사표에는 빠짐없이 ‘공정’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불공정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마치 공정이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듯하다.

공정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한다. 하지만 여야 대선 유력 주자들의 출사표에 담긴 공정과 우리 사회의 각 연령층이 생각하는 공정의 개념은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지난 2020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보안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한바탕 ‘불공정 홍역’을 치렀다. ‘꿈의 직장’ 정규직 자리를 비정규직들이 어렵지 않게 차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었다. 이는 실력과 스펙을 쌓아 가며 취업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 온 이들에게는 커다란 상실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당연히 이들은 정의롭지 못한 데다 불공정하다고 여길 수 있다.

여기에 ‘조국 사태’와 여권 일부 의원들

의 ‘내로남불’ 행태는 불공정 논란을 더욱 키웠다. 이 때문에 그동안 진보층으로 여겨졌던 20·30대가 현 정부와 여권에 등을 돌렸다. ‘실력(능력)’에 따른 공정한 경쟁’을 외쳐 왔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권에서 돌풍을 일으킨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능력 우선주의’와 ‘무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와 진보 진영에서 말하는 공정의 개념은 차별을 없애기 위한 ‘약자의 편’이 우선시된다.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는 것이 공정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공정은 이처럼 진영별로, 연령별로 생각의 차이가 크다. 특히 경제력과 학벌 및 사회적 자본까지 대물림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으로 가는 길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여야 대선 주자들은 단순히 진영 논리에 따른 공정을 주장만 할 것이 아니다. 세대별 공정의 개념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이를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